

기사 작성자를 위한 리포트

기사 개요

제목: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, '계엄 정국'에 일괄 석방 우려

출처: 한국일보, 2025.02.04

기자: 최동순 기자님

기사에 대한 평가

최동순 기자님, CR 프로젝트를 통해 귀하의 기사를 평가했습니다. 이 평가는 건설적 개선을 위한 것으로,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.

1. 선정적 표현과 맥락 생략

기사에서 "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"라는 제목을 사용하셨는데, 이는 수용자 중 강력범죄자가 0.09% (50명/1,800명)에 불과함에도 전체를 위험 집단으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습니다.

윤리 위반 근거:

언론윤리헌장 제7조: "고정관념과 편견을 부추기는 표현을 삼간다."

개선 방안:

제목을 사안의 본질(입법 지연)에 집중해 재작성. 예: "외국인보호소 법 공백 임박...여야 합의 시급"

범죄 사례 제시 시 "일부 수용자" 명시 및 비율 데이터 반드시 병기.

2. 익명 취재원의 과도한 의존

"법무부에서 일했던 한 변호사" 발언을 인용하셨으나, 해당 인물의 현직 여부·전문성 검증 없이 법 제정 촉박성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.

윤리 위반 근거: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: "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."

개선 방안:

익명 취재원 대신 법제처 발표 또는 국회 입법예고 문서 등 공식 자료 인용.

부득이한 경우 "전 법무부 변호사 B"처럼 신원 확인 가능한 가명 처리.

3. 인권 감수성 부재

"중국 국적 장모씨"의 범죄 세부 내용을 공개하셨는데, 이는:

- ① 피해자 유족 2차 피해 유발
- ② 재판 받은 범죄자의 재사회화 권리 침해

윤리 위반 근거:

인권보도준칙 제2장: "범죄자의 얼굴·성명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."

개선 방안:

범죄 사례 기술 시 "40대 중국인 남성" 등 최소한의 식별 정보만 사용.

피해자 연관 정보(예: "의붓딸") 완전 생략.